



[해설]
부르는 게 값
강동구 전세
7개월만에 3.8억 ↑
03



Economy

코스피 2391.96 (0.00)	→	코스닥 871.62 (0.00)
금리 (국고채 3년) 0.907 (-0.003)	↓	환율 (원·달러) 1153.30 (-4.90) (8일)

‘경제살리자’ 강조하며 기업에 족쇄거는 규제 공화국

2015년 11월 11일, 메트로신문은 경제 중심으로 시장경제 창달에 힘쓰고, 정보의 흥수에 빠져 있는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사명 아래 ‘뉴메트로 선언’을 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메트로신문은 메트로경제를 창간하고, 국내 최초로 유·무가지 동시 발행을 하며 기업·독자와 함께 5년을 걸어왔다. 메트로경제는 지난 5년간 우리 경제의 부가 가치 창출 근원인 기업들이 주주, 고객, 종업원, 국가를 위해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왔는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돌파해야 하는지 등을 4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뉴메트로 5주년 기업과 함께 한 5년, 함께 할 50년

1부 韓경제, 도전과 응전의 5년

①기업하기 힘든 나라

상법·공정거래법·금융감독법 등 정부 ‘공정경제 3법’ 개정안 의결

기업 투자악화, 경영위축 등 우려
재계 호소에도 원안대로 강행 추진

한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 여기에 정부가 기업을 옥죄는 법안까지 추가로 내놓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

그동안 기업들은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생존 전략을 구상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정부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원안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

고 있다.

재계는 이들 법안이 그대로 도입되면 기업이 투기자본에 몰락하고 경영권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투자마저 악화돼 경영 마비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쏟아지는 규제’ 기업하기 힘든 나라

11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반도체와 IT,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지만 인공지능(AI)와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등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는 각종 규제에 막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신사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문제가 된 ‘타다 금지법’처럼 혁신산업은 정책에 의해 경쟁력을 잃고 있다. 에어택시나 자율주행 배달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한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봇 산업 등 주요 국가 정부에서는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규제에 막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작년 국가경쟁력 평가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총 141개국 중 ‘혁신 역량’ 6위, ‘비즈니스 역동성’ 25위 등 혁신 생태계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규제가 덜하다고 느끼는 체감도는 87위에 그쳐 방글라데시(84위), 에티오피아(88위)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처럼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정부 규제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8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 3법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로 넘어갔다.

상법 개정안은 모회사 주주는 손해를 발생시킨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와 3% 의결권 제한 규정도 포함됐다. 최대 주주는 주식을 80% 보유해도 최대 3%만의 결권을 인정받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 담합이나 입찰 짐짜미 등 ‘경성 담합’을 두고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했다.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은 대표회사 중심으로 내부 통제협의회를 꾸리고 그룹의 주요 위험 요인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복합금융그룹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현재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자동차, DB 등 6개 그룹이다.

한국 경제단체장과 기업인들은 각종 기업 규제 법안 처리에 혈안이 된 정부

〈공정경제 3법 주요 내용〉

상법 개정안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 선임
	3%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금융그룹 감독법 개정안	과징금 상한 상향
	금융자산 5조원 넘는 비(非) 지주 금융그룹 등에 대한 감독

와 거대여당을 향해 “다시 한번 고민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현재는 우이송경(牛耳誦經·쇠귀에 경 읽기)에 그치고 있다.

결국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및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우리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미래 투자는 접어두고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세나 각종 소송에 시달리거나 경영권 방어에 온 신경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상황에 놓였다.

또한 우리 기업들은 향후 노조와 같은 해결에도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압박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안들을 우후죽순 내놓고 있기 때문.

(4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빅히트 청약 환급금 58조, 어디로 갈까

개인 투자자금 주식 순매수 가능성
내년 대어급 IPO 대기자금 예상도
증권업계, 증거금 잡기 이벤트 분주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청약 환불이 끝난 가운데 다시 증시로 돌아온 자금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빅히트 공모주 청약에 납부된 58조2000억원 규모의 증거금은 지난 8일 고객 계좌로 모두 환불됐다. 함께 기업공개(IPO) 시장 대여(大魚)로 거론됐던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청약 이후 개인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순매수했던 점을 복기하면 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고는 46조989억원으로 집계됐다. 빅히트 청약 첫날이었던 지난 5일 63조 9136억원보다 18조원 가까이 빠졌다. 같은 기간 투자자예탁금 역시 58조312억원에서 47조733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심조원대 대기성 자금이 증발한 것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은 아니다.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때도 같은 상황이 연출된 바 있다.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 전날이었던 지난 6월 22일 CMA 잔

고는 57조5246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청약 마지막 날이었던 24일 CMA 잔고는 46조8517억원까지 줄었다. 그리고 청약이 끝나자마자 개인투자자의 폭발적인 매수세가 시작됐다. 청약이 종료된 이후 10거래일간 개인은 유기증권시장에서 2조5914억원 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대형 IPO가 끝난 만큼 당분간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증시에 머무를 가능성 이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석 이후 코스피 지수가 오름세를 기록했던 것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많은 자금들이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유입될 것”이라며 “나머지는 은행이나 머니마켓펀드(MMF), 내년 초 예정된 다른 대

규모 IPO에 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동성 장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게임즈 상장 이후 약 증거금의 27%인 약 15조7000억원이 고객 예탁금으로 유입됐다”며 “빅히트 역시 환불일 이후 고객 예탁금이 상당폭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개인투자들은 빅히트 청약이 종료된 후 지난 6~7일 2거래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5505억원 규모를 순매도 했다.

증권사들은 빅히트 청약이 종료되자 기다렸다는 듯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기 시작했다. 환불된 증거금을 불들어 놓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해외 아닌 자국 플랫폼만 압박’ 공정위 제재 강화에 업계 비판

플랫폼법 제정안 입법예고
과도규제에 성장 저해 우려

네이버에 있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플랫폼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취지이지만 업계에서는 자국 플랫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일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쇼핑과 동영상 영역에서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시장점유율을 높여왔다는 이유로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제재에 즉각 반발에 나서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요구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다른 업체 배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시장을 획정한 기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다나와, 에누리 등 ‘쇼핑 검색서비스’와 G

마켓, 쿠팡 등을 ‘오픈마켓’으로 분리해 시장을 획정했는데 네이버는 쇼핑 검색 서비스 사업자로 봤다.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서 쇼핑 검색과 오픈마켓을 모두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에도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자신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경쟁사인 카카오에 주지 못하도록 했다며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네이버 부동산 제재를 두고 “이번 사건은 ICT분야 특별전담팀이 출범한 이래 조치한 첫 번째 사건으로,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이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제재 강화를 예고했다.

(4면에 계속)

/구서윤 기자 yuni2514@

/송태화기자 alvin@